

靑 “5당 대표 회동 준비 다 돼있다”

日 대응 계기로 성사될까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중단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논의에 불씨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야 대표 회동의 출발점이 외교·안보 사안 만큼은 야당과 상세히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데 있다는 점에서 재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명분은 갖춰진 셈이다.

정부 여당의 선결 조건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경우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들어갔고, 자유한국당인 내세운 경제위탁 토론회 개최 역시 합의의 틀을 이루는 등 큰 틀에서의 여건은 마련됐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귀순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해 당장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재추진하기엔 아직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공개 제언한 것은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성사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야당과의 공유를 위해서도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에 규제 철폐와 협의를 촉구하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세요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실효성 있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조건부 협력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9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의 외교안보 문제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이미 5당 대표 회동을 위한 준비가 다 돼있다. 국회에서 5당 대표 회동에 대한 시간과 방식을 합의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바른미래 “윤석열 사퇴” 민주·평화 “검찰총장 책임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자유한국·바른미래당이 도덕성 논란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도 이와 관련 윤 후보자의 명쾌한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를 지지하며 지명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평화당도 검찰 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다.

기자회견을 통해 윤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김도읍·김진태·이은재·주광덕 의원 등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이제 검찰도 정치화되었고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된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능한 것이라는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한국당 “국민 우롱 거짓말잔치...청문보고서 채택거부”

바른미래 “도덕성 용납안돼...위증, 어떤죄보다 무거워”

정의당, 변호사소개 촉구 관련 “명쾌한 입장 재정리 해야”

민주당 “정치논란 타협 안할듯...한국, 황교안 방어급급”

평화당 “소신과, 정치적 중립 기대...검찰개혁 앞장서길”

자유한국당은 9일 윤 후보자가 막역한 사이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짙어지면서 거짓말 논란이 일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민이 우려했던 거짓말 잔치였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커녕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져야 한다.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아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별도

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자가 만약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자에게 자신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도 보류하기로 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른 문제는 차치한다고 해도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종일 거짓말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윤 후보자의 자신사퇴를 요구한다. 윤 후보자가 버티면 버

틸수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청문회 자리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위증은 공직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어떠한 죄보다도 무겁다. 위증한 공직 후보자에게 법과 제도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맡길 수는 없다. 더구나 법을 직접 집행하는 검찰총장 후보자로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명쾌한 답변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과적으로 사건 수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37조에 따른 소개를 볼 수 없다고 윤 후보자가 항변했지만, 이는 본인이 청문회에서 계속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 없다”는 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은 윤 후보자의 문제다. 오늘이라도 윤 후보자가 명쾌하게 입장을 재정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는 일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장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날 책임자임을 보여줬다”고 치켜세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도 정치 논란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국당을 향해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당성에 대한 한 방은 없었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대리 청문회로만 기록됐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확실한 정치적 중립을 기대한다”고 지지의 뜻을 보였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어느 정권 아래에서나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검찰의 과거 행적을 보면 그런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이제 검찰이 거듭나야 한다. 때문에 소신파로 알려진 윤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국민의 요청에 응답하며 검정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도 앞장 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유성엽 “공무원 30% 감축해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대 기조에 맞서 “170만 공무원 중 30%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 또 공무원 연금을 대폭 줄이고 공기업 채우도 크게 줄여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며 공공부문 축소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희망을 찾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부문 축소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확대에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감세와 공무원 축소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이 꿈인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며 “세계적 투자자 집로지는 ‘10대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 올린 투자할 매력 없다”고 했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공무원 되는 것이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며 냉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 채용하면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이 모두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 세금으로 성장시키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경제난의 해법을 ‘DJ(김대중) 노믹스’에서 찾아야 한다”며 “당시 DJ 정부의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20% 감축이었다.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라면서 “그런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6년간 근로소득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세금만 두 배로 늘었다.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시켜 국민들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세 없이 임금으로 소득을 올리려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 지급이라도 해야 한다”며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역차별이다.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을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은 따로 바시는 안 된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서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고정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개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엔 심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84일 간 이어진 국회 파행 사태와 관련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번 5·18 망언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지정 ▲5·18 민주화 운동 진상조사단 구성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